



[금융]
KB국민은행의 스포츠 마케팅 리딩뱅크에 '사이다' 04



Economy

코스피	2157.18 (+19.08)	코스닥	754.76 (+15.67)
금리 (연이자율)	1.81 (0.00)	환율 (원/달러)	1129.80 (-3.90) (12일)

(年 24조 공제혜택)

3년 마다 흔들리는 '카드 공제' 근본책 없이 언제까지 연장만?

정부, 연장전제로 개편 검토
소득별 공제율 축소 가능성
서민·중산층 세금부담 늘 듯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이〉

구분	소득공제율
1999년	제도도입, 10%
2002년	10→20%로 상향
2005년	20→15%로 축소
2007년	15→20%로 상향
2012년	20→15로 축소, 체크카드 20→30%로 상향
2016년	소득공제 한도 소득별 차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논란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도입돼 일몰번째 일몰이 연장됐다. 올해 말에 연장되면 여덟번째다.

이전 정권과 같이 이번에도 사실상 폐지에는 실패했다. 3년 한시법으로 출발했지만 7차례에 걸친 일몰연장으로 근로소득자는 이미 보편적인 공제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다 공제규모가 24조원에 달한다. 조세저항이 그만큼 격렬할 수밖에 없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일몰(종료)이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편 여부와 방향 등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012년이나 2016년과 같이 신용카드 소

득공제율을 줄이는 대신 다른 혜택을 늘리거나 소득별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2년 말, 2005년 말, 2007년 말, 2009년 말, 2011년 말, 2014년 말, 2016년 말까지 매년 일몰이 연장됐다

공제율도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처음 1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제도 효과가 입증되면

서 20%까지 상향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줄이고,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세제혜택이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는 점이다. 이미 신용카드 등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도입목적은 달성한 반면 공제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됐지만 없애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도 홍 부총리의 발언에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에 17만~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자 증세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축소없이 오는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추 의원은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에 이르는 24조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당 제도로 인한 혜택의 90% 이상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에게 집중돼 있어 이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100 PLUS

메트로신문 '2019 100세 플러스 포럼' '풍족한 노후' 재테크 토크쇼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8일(목) '2019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의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재테크 토크쇼'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 은퇴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다양한 규제 속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푼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산센터 부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재테크 토크쇼'에서 재테크 전략을 찾길 기대합니다.

행사명 :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주 제 :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
일 시 : 3월 28일(목) 08:30~13:00 (VIP 티타임 08:30~08:55)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주 최 : 메트로신문



삼성, 도쿄에 '갤럭시 하라주쿠' 개관
삼성전자가 일본 소비자들에게 글로벌 스마트폰의 혁신을 알리는 체험공간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하며 열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를 자랑하며 전 세계 갤럭시 쇼케이스 중 최대인 '갤럭시 하라주쿠'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역사를 알리는 동시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10'과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체험에서부터 구매까지 할 수 있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갤럭시 하라주쿠'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삼성전자

장하성 등 전직 靑 관료들 '재취업이 가장 쉬웠어요'

전직 청와대 출신들의 재취업 소식이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청와대 출신 가운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문대립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한정원 전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왼쪽부터 문대립 전 청와대 비서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SBS 화면 캡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최근 주중국대한국 대사에 내정됐다.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야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약 17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작년 11월9일 정책실장직을 내려놨다. 숨고르기도 잠시, 청와대는 지난 4일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임명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회전문 인사'라고 꼬집었다. 장 전 실장이 중국 런민대학교와 푸단대학

교 교환교수를 지낸 이력이 있거나 외교전문가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든 평가다.

문대립 전 비서관을 바라보는 야권의 시선 역시 장 전 실장 때와 같다. 문 전 비서관은 최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정부가 선거에 낙마한 청와대 출신 인사를 공기업 수장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전 정부의 적폐로 규정된 인사행태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되풀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3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

사교육비 8000억 증가... 1인당 月 29만원 '최고치'

지난해 사교육비 19.5조원
학생 73%, 주당 6시간 투자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추진

사교육비가 1년 만에 8000억원 증가하고 3년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대입 정책의 변화가 사교육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3~5월과 7~9

월에 지출한 사교육비를 같은해 5~6월과 9~10월에 전국 1486개 교 학부모와 교사 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통계청 공동 사교육비 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까지 별도 조사했던 진로·진학 학습 상담비를 사교육비에 포함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사교육비 등락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사 결과,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000억원으로, 전년(18조 7000억원) 대비 8000억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첫 조사(2007년) 때 20조원에서

2009년 21조 6000억원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 2015년 17조 8000억원으로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18조 1000억원), 2017년(18조 7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 추세다. 이번 조사에 첫 포함된 진로·진학 학습상담비는 연간 총액 616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00원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8조 6000억원(↑5.2%), 중학생 5조원(↑3.5%), 고등학생 5조 9000억원(↑3.9%)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체 사교육비 중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4조 3000억원으로 전

년(13조 6000억원) 대비 7000억원(↑5.0%) 증가했고, 이 중 국어는 1조 4000억원(↑10.2%), 영어 5조 7000억원(↑4.6%), 수학 5조 5000억원(↑2.9%)이었다. 국어 사교육비 증가폭이 타 주요 교과 의 두 배 이상 많았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전년(27만 2000원) 대비 1만 9000원(↑7.0%) 올랐고,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39만 9000원으로 전년(38만 2000원) 대비 1만 7000원(↑4.6%) 증가했다. 교과별로 영어(월 8만 5000원), 수학(8만 3000원) 사교육비 지출이 컸다. (2면에 계속)

/한승준 기자 hys@